

정쟁도 멈췄다... 여야, 이희호 여사 한목소리 애도

민주 "민주주의·인권운동 거목"
한국당 "여성들 삶에 큰 울림"
바른미래 "민주화의 큰 나무"
평화당 "이희호 기억될 것"
정의당 "평등·평화 이어가겠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소식을 접한 여야는 11일 일제히 애도를 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약산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 등 국정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등 원내

정당 모두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넘어 20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이 여사의 소천을 애도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당으로서 두 분 대통령(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민주진영이 가장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돼 주셨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크다"며 "고난을 이겨내고 존경받는 삶을 사셨던 이 여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큰 별을 잃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 지도자 이희호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추모한다"며 "끓임없이 더 좋은 세상의 등불을 밝혔던 이 여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퍼스트레이디였고, 새 시대의 희망을 밝히는 거인이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희호 여사께서는 여성이 가진 포용의 미덕을 우리 정치권에 보여주셨다"며 "영부인을 넘어 김 전 대통령의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국민과 여성들의 삶에 큰 울림을 남겨주셨다"고 추모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서거하신 김 전 대통령 곁으로 가서서 생전에 못 다한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

지'였던 이희호 여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다"며 "유가족 및 친지 분들께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47년간 내조한 배우자이자, 민주화 동지를 넘어 스스로가 민주화의 큰 나무로 무성히 있을 피워낸 민주화 운동가"라며 "김 전 대통령을 만나 사무친 그리움을 풀고, 헤어짐 없는 영원한 곳에서 한결같이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희호 여사님의 여성 리더적인 면모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의 반려자를 넘어 독재 속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정치적 동지로 자리했

다"며 "이희호'라는 이름은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성 평등, 민주주의, 평화로 상징되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어가겠다"며 "고인의 필생의 신념이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6·15 공동선언을 계승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 변명을 위한 평화 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이희호 여사는 한국 여성운동 1세대로 평생 여성인권 신장에 힘쓰셨던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다. 여성문제연구원 창립을 주도하여 남녀차별법 조항 철폐에 뛰어들어 결국 호주제 폐지로 이어졌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여야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여사 별세를 추모하는 글을 띄웠다.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희호 여사님 소천 소식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평화의 사도시던 김대중 대통령의 반려이신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 여성으로서 시대의 선각자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이전에 여성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이 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페이스북에 애도 글을 남겼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희호 여사님으로부터 탄생하셨다고 저는 자주 말했다"며 "이희호 여사님의 소천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회 정상화 협상 새국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패스트트랙 문구 합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놓고 시각차... 새 변수로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불발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이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여야가 최대한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또 다른 뇌관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에 제안하는데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단었다 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양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당정 '기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한국당 해산 청원' 靑 "정당 평가는 국민 몫"

강기정 수석 답변...민주 33만명·한국당 183만명 청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관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4월 22일에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기록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된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4월 29일에 시작돼 한 달 사이에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두 청원을 두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

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존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을 때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절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4대강 보 파괴시 책임 묻겠다"

국회서 토론회

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 해체 작업을 성토했다. 당내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진석 특위 위원장, 정중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4대강 국민연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과 이명박 정

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맞춰 말쑥한 4대강 보를 적폐로 몰고 없애려고 한다"며 "잘못된 공약 내놓고 고집하는 것은 옹고집이고,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의료진 | 최범재 김영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시연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